

취업자 증가폭 ‘1년여 만에’ 최소… 한파·청년 부진 겹쳤다

국가데이터처, ‘1월 고용동향’

취업자 10만8000명↑, 증가폭 둔화
한파·영향으로 고령층 현장투입 위축
20대 19만9000명↓, 청년 고용 악화
그냥 쉬었음 278만4000명, 1월 최대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최근 13개월 사이 가장 작은 수준까지 둔화했다. 1월 중~하순 기간 기록적인 한파의 영향으로 고령층의 근무현장 투입이 크게 위축된 데다 청년층 일자리 부족도 지속된 결과로 해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98만6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0.4%(10만8000명) 늘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12·3 시대 탓에 감소(-5만2000명)로 돌아섰던 2024년 12월 아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계엄령사건 다음 달인 2025년 1월(+13만5000명) 보다도 적다. 최근 석 달치는 2025년 10



지난 3일 경기도의 한 양복 대여업체에 면접용 정장이 진열돼 있다. /뉴스스

월+19만3000명, 11월+22만5000명, 12월+16만8000명이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14만1000명), 30대(+10만1000명), 50대(+4만5000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20대(-19만9000명)와 40대(-3000명)에서는 감소했다.

특이점은 60세 이상에서 일자리 증가가 이어졌지만 실업자 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 1월 실업자 증가 폭을 보면 60세 이상이 +10만1000명으로, 30대(+2만5000명), 20대(+1만2000명) 등에 크게 앞섰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60대 이상은 노인일자리가 확대됐으나, 한파 등으로 노인일자리에 투입되지 못하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 쪽으

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층은 고용 상황이 좋지 않고 (경력·수시 채용 선호 등) 고용문화 변화 등으로 실업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김태웅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장은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하락하고 쉬었을 숫자도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 여건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 증가, 건설·제조업 등 산업적 부진을 비롯한 산업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그냥 쉬었음’ 인구가 278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명(4.1%)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1월 기준으로는 가장 많다. 특히 60세 이상과 20대에서 각각 11만 8000명(9.9%), 4만6000명(11.7%) 늘어났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만5000명), 운수 및 창고업(7만1000

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4만5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농림어업(-10만7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9만8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4만1000명) 등은 감소했다. 제조업은 19개월, 건설업은 21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지난달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9만2000명(1.2%), 일용근로자는 2만 6000명(3.3%)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9만7000명(-2.2%) 감소했다.

1월 고용률은 61.0%로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동월에 비해 0.4%p 올랐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러나 15~29세 고용률은 43.6%로 1.2%p 하락했다. 이는 2021년 1월(4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연금특위, 지선 앞두고 연금개혁 ‘속도’

지방선거 전 큰 틀 정리 추진 실제 입법은 선거 이후 전망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의 ‘연금개혁’ 논의가 분주해졌다. 여·야가 6월 지선을 앞두고 ‘선거모드’로 진입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이 연금개혁 우선순위 설정,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주요 의제를 서둘러 논의하는 모습이지만, 실제 입법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야 활성화될 전망이다.

◆ 연금특위, 지선 전까지 ‘큰 틀’ 마련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최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보장 확대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갔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주요 안건에 우선순위를 설정해 논의를 서두른다.

지난 5일 국회 연금특위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민간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말 연금특위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 뒤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여·야가 각각 동수 추천한 자문위원 22명이 참여했다.

이날 중간 보고를 제출한 민간자문위의 의견은 크게 두 갈래로 엇갈렸다. 민주당에서 추천한 자문위원들은 ‘소득보

“방사선 측정·3D 스캔·시료 채취까지”

» 1면 ‘현대차, 사족보행…’서 계속

현장에 투입된 스팟은 핵시설 환경에 맞춰 다양한 감지 센서와 기능을 장착했다. 또 스팟은 360도 영상 촬영과 3D 라이다 스캐닝을 통해 현장 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하며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관리자에게 원격으로 상황을 전달한다.

또 감마선과 알파선 측정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사선 특성화’ 작업에도 투입된다. 최근에는 시설 내 방사성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시료 채취 시험 작업도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셀라필드는 전했다.

이번 사례는 로봇이 고위험 환경에서 사람을 대신해 작업을 하면서 산업 현장

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인간 작업자가 직접 하던 일을 스팟으로 대체하며 작업자의 위험 노출을 크게 줄인 데다, 사람보다 오랜 시간 현장에 머물며 점검을 할 수 있어 전체적인 해체 작업 속도도 빨라졌다.

셀라필드는 2021년 스팟 시험 운영을 시작으로 2022~2023년 복잡한 환경에서의 운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2024년에는 고위험 방사성 구역에서도 스팟을 점검 작업에 활용했고, 지난해에는 영국 원자력 분야 최초로 발전소 허가 구역 외부에서 스팟 원격 시연에 성공하며 작업자와 현장을 분리한 완전 원격 작업 가능성을 확인했다.

/양성운 기자 ysw@

2026년 7월 1일 인천 동구와 중구(내륙)가 하나되어 제물포구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심벌마크(CI)



제물포구의 한글 자음 ‘ㅈ’과 비상하는 갈매기,
푸른 앞바다 및 상승하는 화살표를 모티브로
중구 내륙과 동구의 통합을 바탕으로한
화합과 성장, 미래로 도약하는 제물포구 상징

캐릭터



인천광역시 동구